광주시의회 "교육청, 늘봄학교 신청도 안해" 질타

교문위서 지적… "시정 기회 박탈"
시교육청 "내부 논의 차분히 준비"
시민협치진흥원도 대안으로 검토

광주시의회가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 운영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을 질타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리 현장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인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탈락'한 것과 '도전도 안한 것'은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어서 진의와 상관없이 한동안 시교육청의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올해 첫 교육문화위원회 '광주시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서임석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돌봄의 양적·질적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남을 포함해 인천·대전·경기·경북 등 5개 교육청을 '2023학년도 초등 늘봄학교' 시범 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대에 희망하는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로, 오는 2025년부터 전국에서 확대 운영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약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는 3월부터 관내 4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도서 지역이 많은 만큼 도시형과 농촌형을 나눠 특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늦어도 오후 7시까지 저녁 돌봄교실도 진행된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 교원, 교육단체 등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늘봄학교'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도 큰 상황"이라며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갑작스레 (늘봄학교 사업을) 통보한 것도 아닌데,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종근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내부적인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불쑥 시범 교육청에 지원할 경우 내부 갈등이 커질 거란 판단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며 "우선 현재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돌봄 실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학부모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먼저다.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를 만드는 기회를 다양하게 가지면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운영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돌봄 현장에 불거지는 문제들을 미리 겪어보고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범 운영 신청조차 하지 않은 시교육청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시범 운영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예행연습 기회"라며 "시교육청은 미리 운영을 해봄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사전에 개선해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전국 확대 시기에야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교육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며 "당장 전남도교육청은 3월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국장은 "광주와 전남의 지역적 특성에 차이가 커 단순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는 오히려 인천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시범 운영 교육청들의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가면서 촘촘히 준비해 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년 설립 예정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해 늘봄학교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시민협치진흥원이 주관하되, 원한다면 (현행처럼) 민간 위탁하는 방식 등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15개 민간 돌봄 기관들에 각각 연 1200만원씩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신청 기간이 촉박하기도 했었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신청하지 않았다. 준비가 안된 상태로 무작정 신청해서 현장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며 "현재까지 명확히 정해진 건 없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잡음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늘봄학교를 도입, 정착시키려 한다. 시민협치진흥원은 그 일환이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나로우주센터 발사시험 중 폭발

터보펌프 등 시설 일부 소실
인명 피해·누리호 차질 없어

고흥군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차세대발사체에 탑재될 터보 펌프를 시험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오후 3시25분께 차세대발사체 상단용 10톤급 터보 펌프 시험 중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터보 펌프는 로켓의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공급 장치다.

화재가 발생한 뒤 펌프로 투입되는 추진체 공급을 차단하고, 비상정지 절차에 돌입해 대응했다. 이후 나로우주센터 내 소방 인력이 출동해 화재 발생 1시간10분 만에 화재 진압을 마쳤다. 오후 7시께에는 모든 현장 조치가 완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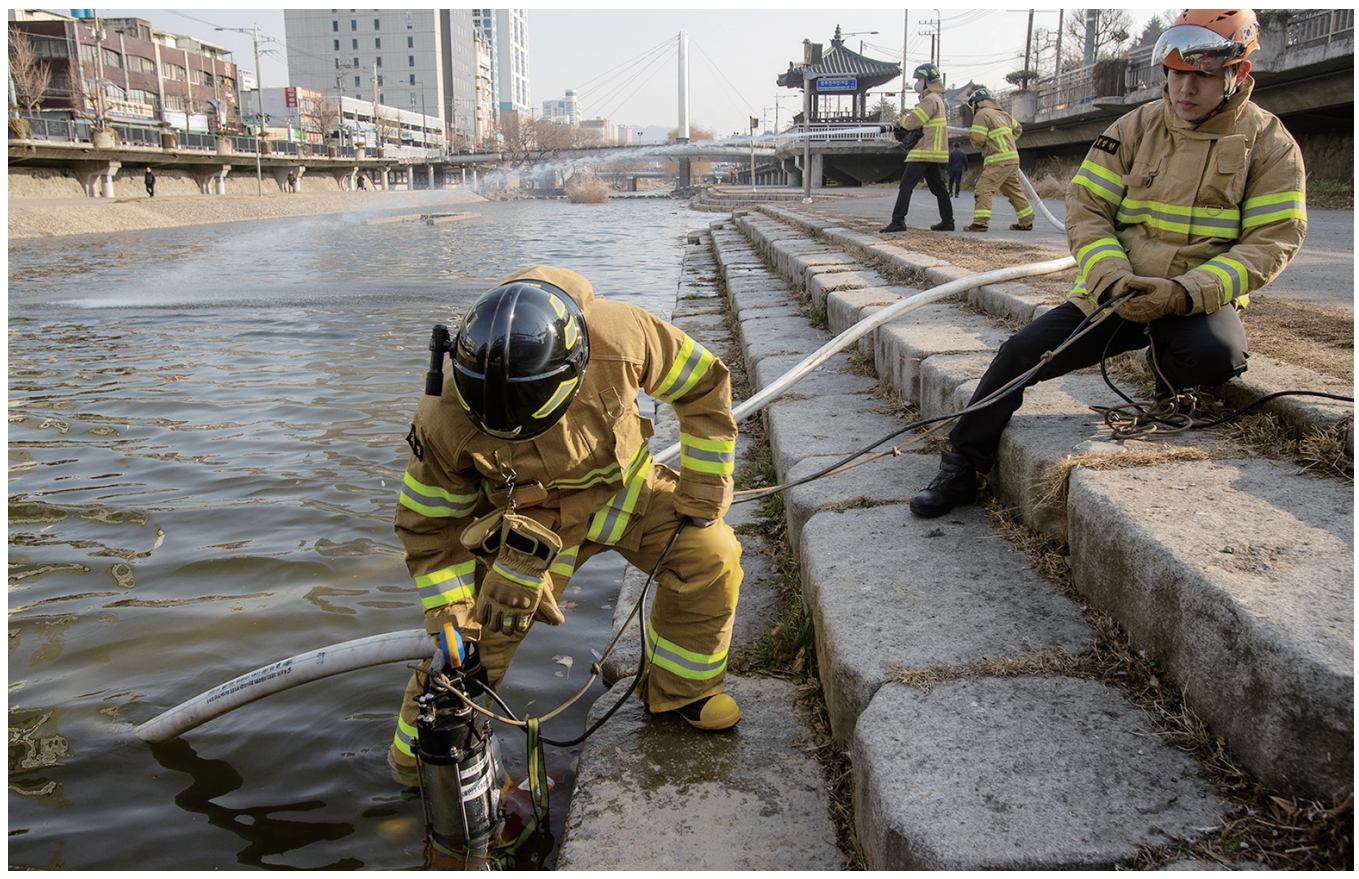
화재로 시험 설비와 차세대발사체에 들어갈 터보펌프가 소실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개발 과정에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이러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런 위험을 고려해 안전 조치를 취하고 시험한다"고 설명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험할 때 폭발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10톤 터보 펌프 설비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한건지, 사고 원인이 펌프 자체의 문제인지 다른 원인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항우연이 시험 설비 복구에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 만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일부 지연되는 건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세대 발사체 관련 실험인 만큼 누리호의 3차 발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누리호는 5, 6월에 3차 발사를 목표로 조립이 되어있는 상태다. 김은지 기자



동부소방, 가뭄 대비 소방용수 확보 훈련 광주 동부소방서 소방대원들이 1일 광주천 일대에서 소방용수 확보, 발전기 및 수중펌프를 이용한 흡수 시연 등 가뭄 대비 소방용수 확보 훈련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